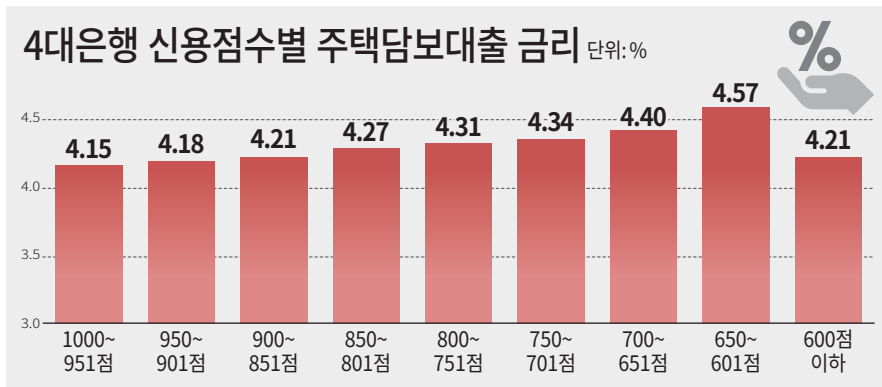
고신용자 오르고, 저신용자 내려… 포용금융에 '대출금리 역전'

4대은행 신용점수 951~1000점 대출 금리 0.09%p 오른 4.13%
600점 이하는 5.86%, 1.43%p↓
주담대는 저신용자 0.06%p 더 낮아



고신용자의 금리는 올라가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에선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총 9개 구간의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에 실행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 점수 951~1000점 기준 평균 4.13%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 0.09%포인트(P) 올랐다.

KB국민은행은 9월 3.89%에서 10월 3.96%로 0.07%p 올랐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4.11%에서 4.23%로 0.12%p 상승했다. 하나은행(4.07%→ 4.16%)과 우리은행(4.09%→ 4.16%)도 각각 0.09%p, 0.07%p 인상됐다.

반면 신용 점수 600점 이하 최저 신용자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5.86%로 전달(7.29%)과 비교해 1.43%p 대폭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은8.53%에서 5.27%로 3.26%p 낮아지고, 신한은행은 7.49%에서 5.48%로 2.01%p 내렸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은행이 고객 신용 점수나 담보가치 등에 따라 매기는 가산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식으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평균 2.6~2.8%대로 비슷했지만, 일부은행이 최저신용 점수(600점 이하)에 오히려 더 낮은 가산금리를 매긴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례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4대 은행의 주담대 중 신용 점수 600점 이하의 금리는 평균 4.21%이지만 850~801점인 금리는 평균 4.27%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06%p 낮았다. 신한은행의 600점 이하 금리는 3.67%인 반면 951~1000점 금리는 4.14%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47%p 낮았다.

신용대출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고신용자(951~1000점, 4.10%)보다 저신용자(600점 이하, 4.09%)의 금리가 0.01%p 낮았고, 하나은행도 고신용자(4.58%)보다 저신용자(3.44%)가 1.14%p 낮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이자부담을 더 시키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건 안되느냐"고 말했다. 10월에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저 신용자들의 경우 고신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모수 자체가 적다"며 "또 저신용자들에겐 보통 은행이 각종 정책대출로 지원한 영향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만능 인증키 10년간 방치… 국민정보 '탈탈'

개인정보 잔혹사
〈中〉 KT

15.7만대 펨토셀 인증키 하나로 관리
펨토셀, 중계기 넘어 '유출 통로'로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2.4억 결제

KT가 10년 동안 방치한 '만능 인증키' 하나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이없게 털렸다. 해커들은 KT가 열어둔 틈을 따라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장악했고, SMS 인증번호는 물론 음성 통화 내용까지 유출시켰다.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도중에도 KT는 이를 감지조차 못해 사실상 국가 기간통신망이 장기간 도청·유출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KT 소액결제 사건의 본질은 '10년간 방치된 인증키'와 '관리 부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귀결된다.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KT가 전국 15만7000여 대의 펨토셀을 단 하나의 '인증키'로 관리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통상적인 보안 장비들이 주기적으로 인증서를 갱신하며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이 인증키는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 장비 하나만 확보하면 누구나 추출이 가능했다. 결국 해커들은 추출한 '만능 인증키'를 이용해 불법 개조한 장비를 정상적인 KT 기지국인 것처럼 위장했다. KT의 코어망은 이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전무했다.

더 큰 문제는 펨토셀이 단순한 중계기를 넘어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통신 구간은 '종단간 암호화(E2EE)'가 적용되어 있어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당들은 펨토셀을 장악해 이 암호화 체계마저 무력화시켰다. 불법 펨토셀은 단말기와 통신할 때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 보안 기능을 강제로 해제(Downgrade Attack)시켰다. 이로 인해 SMS 인증번호는 물론, 개인정보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평문으로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일부 단말기는 애초에 암호화 설정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더했다.

해커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실시간으로 가로챘다. 36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2억4000만 원이 결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펨토셀이 설치된 지역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이 도청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전 탈취 범죄로 축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대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도청 인프라가 드러난 보안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서현 기자 seoh@